문화전당 '일부기능 법인 위탁·재정지원 법에 명시'… 절충안 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운영주체, 광주시 '정부조직' 문체부 '반民반官' 시각차

국회의원·광주시·시의회 등 참여 보완법률안 마련키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법인위탁을 전제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절충안들이 제기돼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또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에 몸담고 있는 박혜자 의원과 광주시, 시의회가 함께 참여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법률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아 관심을 모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토론회가 7일 오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행사에 참석한 이기훈씨 등 '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범시민연석회의' 관계자, 광주시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 이승권 조선대교수는 한목소리로 문화전당의 법인위탁을 반대했다. 이들은 "애초 특별법 안대로 문화전당은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국회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창기 강동아트센터관장과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법인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토론회 내내 문화전당 법인위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으나,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사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 기능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안이 거론됐다,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처럼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전당의 본래 기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문화전당의 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정무직(최하 차관급)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임동호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향후 협의된 논의를 바탕으로 박혜자 의원 주관의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혜자 의원은 이날 행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여전히 공무원 기구로 남게 되고, (추진단이)현재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류·교육·연구 기능을 교류기능으로 축소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복원하는 데 동의했으며, 가장 중요한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법인화법처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운영주체 및 위임범위에 대한 시각에서 광주시는 '최소한 기관으로서의 정부조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나, 문체부는 '법인에 위탁을 해도 반민 반관 형태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11일 공고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박혜자 국회의원, 김상호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공〉

'민망 광주' 인권도시 내세우는데 인권침해 사례 줄지 않고 평화의제 접근 소홀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내세우며 각종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줄지 않고 있는데다 평화의제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의 각종 정책 및 업무 추진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 의원은 이날 "인권담당관실이 담당하는 민주·인권·평화 업무 중 대부분이 인권에만 치우쳐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광주에 통일문제와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집단이 없다"며 "광주시가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평화의제를 만들어야 하고 통일교육과 남북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 인권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접수된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건수가 ▲2008년 314건 ▲2010년 492건 ▲2011년 530건 ▲2012년 7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 인용된 건수도 ▲2008년 4건 ▲2010년 27건 ▲2011년 37건 ▲2012년 48건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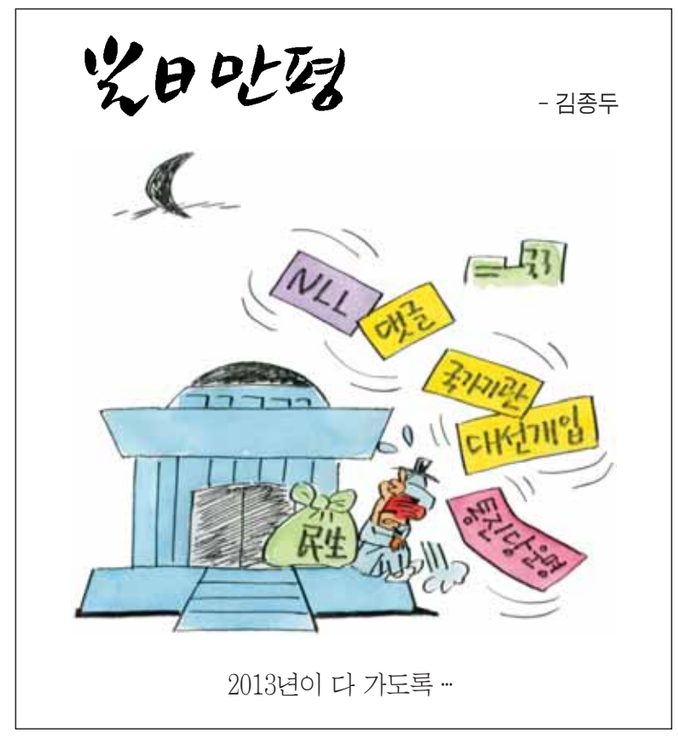
서 의원은 "인권 관련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시민들이 인권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인권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서 의원이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처리된 진정 건수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제주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특히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늘어난 것은 광주시가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펼친 결과 그동안 내부적으로 잠재돼 있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광주시 5·18 선양사업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어 교과서 왜곡이나 5·18 폄하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개정을 통해 본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해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에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기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이 다 가도록 …

'빈곤 호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북 1위·전남 2위·광주 3위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가 진선기(민주·북구1) 광주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만752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며,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7개(세종시 제외)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은 4.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은 4.6%로 뒤를 이었다.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02.5%임에도, 광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신의 집을 보유한 이른바 자가(自家)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0.3%에 불과했다. 월 6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도 82%에 달했다.

진 의원은 "호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 2, 3위를 차지한 것은 호남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 것"이라며 "빈곤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저소득층 주거안전 대책과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있지만, 영구임대주택 신축 및 일반 주택 매입을 통해 수급자 가구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지역	인구수(만명)	수급자(명)	수급비율(%)
전국	5,000	1,300,499	2.6
서울	997	188,017	1.9
부산	345	128,650	3.7
대구	248	93,208	3.7
인천	280	66,713	2.4
광주	151	57,528	3.9
대전	154	41,819	2.7
울산	112	14,819	1.3
경기	1,194	178,155	1.5
강원	150	54,936	3.7
충북	155	43,908	2.8
충남	213	53,594	2.5
전북	181	89,906	4.9
전남	177	81,249	4.6
경북	265	97,784	3.7
경남	325	87,559	2.7
제주	56	19,841	3.6

〈자료 : 진선기 광주시의원〉